

# 日 수출규제 초당적 대응 한 목소리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무슨 얘기 나눴나

문 대통령 “지혜 모으자” 이 “규탄결의안 채택” 황 “정상회담을” 손 “대책회의” 정 “애국·매국 두 길 뿐” 심 “안보협정 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정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존엄하게 성토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의 방법으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 토크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의 잘못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반일(反日) 감정에 호소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일 관계에 관여해온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 대책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이낙연 총리 같은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 해결에 몰고갈 터”라고 했다.

민주당 정동영 대표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나 매국이나 두 길만 있다”며 국론통합을 강조한 뒤,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가 요구되며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한·일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국제사회의 (우리의) 노력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경제 전쟁은 쉽게 안 끝난다. 어차피 한번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며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심 소리로 이어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 보복을 예측 못 했는데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분석·경정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생각은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방장관 해임 등 위기 국면에서 여당이 양보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1000만명에 가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있다고 우려했다.

개헌과 선거제 개혁도 거론됐다.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 정개특위 선택한 민주, 위원장에 홍영표 내정

“선거법 여야 합의 처리 바람직”...사개특위는 한국당 몫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를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홍 위원장)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결자해지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할 책

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직전 원내대표 시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끌어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한한 여야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법이 아발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이어서 그것(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대안이나 현실적인 합의 방안이 있다면 고수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선거법은 국회의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여론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평화당 갈등 지속에 호남 민심 냉랭

당권파, 대변추진위 구성  
반당권파, 대안정치 외연확장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결집을 통해 제3지대에서의 정계개편 동력을 키우기보다 당권파와 반당권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호남 민심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발’이 거론되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통해 정지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당내 주도권 다툼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권파와 반당권파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민심의 역풍 등으로 제3지대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정치적 공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측이 조만간 접점을 찾지 않는다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유성열 원내대표 등 반당권파의 신당 창당 준비모임 발족에 대한 ‘맞팔’ 격으로 제3지대 구성을 위한 당내 특별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당권파의 움직임과 상관 없이 자강에 집중하면서 제3지대 구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자강에 힘쓰되 현역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외부 인사 등을 망라해 대변추진위를 구성해 제3지대 형성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19일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전북 전주에서 첫 지역 총선거를 띄운다. 하지만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는데 대해 정 대표가 너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반당권파는 전발 발족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안정치는 이날 오전에도 조찬 회동을 함께 하면서 인재영입 전략논의하고 각자의 외부 인사 접촉 상황을 공유했다. 대안정치에 참여하는 최경환 의원은 통화에서 “외부 인사 접촉을 어떻게 할 지 방안을 논의했다”며 “당분간은 인재영입과 창당 여론을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발 정 대표가 반당권파의 박지원 의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아주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정동영 대표도 함께 하자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자강에 힘쓰되 현역의원과의 원외지역위원장, 외부 인사 등을 망라해 대변추진위를 구성해 제3지대 형성

## 바른미래, 단식위원 두고 장외 공방

혁신위 “손 측근이 조롱”  
손대표 측 “손과 무관”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18일 손학규 당 대표 측근들이 단식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조롱했다며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위였을 뿐 손 대표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혁신위 이기인 대변인은 18일 유의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손 대표 정부 특보 정 모 씨와 손 대표가 임명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 모 씨가 권 위원을 찾아 ‘어젯밤에 뭘 좀 먹었느냐, 짜장면 먹은 것 아니냐’는 일베(일간베스트)식 조롱과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17일 손 대표 측근 당원 이 모 씨는 당 대표실 앞에서 단식 중인 권 위원의 뒤편으로 권 위원을 개로 묘사한 현수막을 걸었으며, 스스로 ‘당 대표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국회에 들어왔다’

고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욕설, 조롱, 비하로 단식 취지를 음해하는 것은 인격살인을 넘어 실제 살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손 대표가 이를 알았다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고, 몰랐다면 해당 당직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의 측근들이 소동을 부린 것처럼 묘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어느 당이나 극성당원은 있기 마련이다. 그 당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당 대표실은 즉각 제지했고 이들의 국회 비판 출입을 통제했다”며 “제가 어제 단식 중인 권 위원을 찾아 유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문제의 인물들이 손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이니 손 대표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농성 중인 권 위원 등 모든 혁신위원도 손 대표가 직접 임명한 분임을 상기 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 알자배기 광산여행 시티투어 가자!

### 광산시간여행투어

호남 정신문화의 뿌리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는 500년 전 광산 이야기

### 광산문화예술투어

지역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광산 이야기

예약방법(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http://www.gwangsangcitytour.com  
(한글도메인 : 광산구시티투어.com)  
시티투어 예약문의 : 광주광역시관광안내소 062)941-6301  
기타 문의 : 문화예술과 062)960-8289  
탑승료 일반 3,000원 / 초등학생 이하 1,500원  
\*식사비, 관람료, 체험비 등은 개인부담

